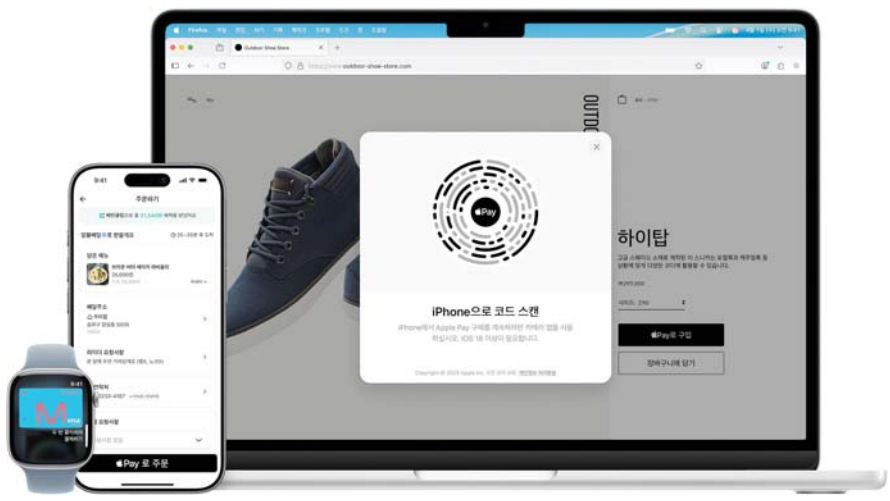
카카오·토스, 애플페이 추진… 카드사, 수수료 등 셈법 복잡

카카오뱅크, 이르면 이달 서비스
토스뱅크, 금감원 약관심사 마쳐

카드사 결제 수수료율 0.40% 중
애플 측에 0.15%수준 지급 부담
삼성페이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애플페이 연동 관련 안내 이미지.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연내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면서 카드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플페이 확산에 따른 경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수수료 부담과 기존 삼성페이와의 이해관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연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뱅크는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도입 관련 약관 심사를 마쳤으며, 카카오뱅크는 현재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에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결제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현대카드 뿐이다. 현대카드는 지난 2023년 업계 처음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 지금까지 독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후발주자로 거론돼 왔으나 아직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애플페이 도입이 본격화되면 카드사의 경쟁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의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만 해도 지난 1년간 170만 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됐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결제 편의성이 강화되면 이용 고객 수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해외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고객군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애플페이의 올해 초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9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에서는 200곳, 중국은 100곳 이상의 금융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젊은 여행객들이 트래블카드 대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이 여전한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현재 카드사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0.40%다. 반면 애플페이 결제 시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40원 중 15원을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 브랜드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승인·매입·정산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카드사의 수익성 부담은 더 커진다. 카드사들과 삼성페이와의 이해관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애플페이가 확산하면 삼성페이가 기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애플페이 수수료 빼고, 기존 프로세싱 비용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관건은 협상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애플페이 도입이 실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카드도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도입 관련 약관 심사를 마쳤으나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애플이 요구하는 비밀유지계약(NDA)도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령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시를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은행연합회, 다음주께 차기회장 후보 공개

조용병 회장 임기, 오는 30일까지
신임회장, 내달 1일부터 3년 근무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 윤종원 전 IBK 기업은행장 /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가 10일 첫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착수한다. 조용병 현 회장의 임기 만료를 20일 앞두고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금융권과 관료 출신 인사들의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첫 회추위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과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신임 회장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은행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이번 회추위는 당초 예상보다 늦게 출범했다. 지난달 말 회추위 구성이 예상됐으나 정기이사회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회추위에는 조 회장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11개 회원은행 대표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각 위원이 1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고, 사원총회에서 선임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잠정 후보군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에는 첫 회추위 개최 6일 만에 후보군을 확정했고, 2023년에는 회추위 구성 11일 만에 잠정 후보 6명을 발표했다. 올해도 이달 중·하순 최종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로는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민간 금융권 출신인 윤종규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KB금융을 이끌며 보험·증권사 인수 등을 통해 비은행 사업을 확대했다. 2023년 은행연합회장 선임 당시에도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고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수락 여부가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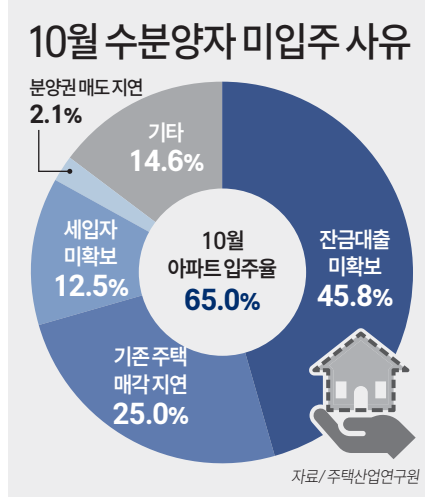
박종복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약 10년간 SC제일은행을 이끌었다. 외국계 은행 경영 경험과 은행연합회 이사회 참여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물망에 올랐다. 윤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은 전 위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 등을 지내며 국제금융과 금융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실제 추천과 수락 여부는 불투명하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회원은행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직전 김광수 회장은 관료 출신, 현 조용병 회장은 민간 금융권 출신이다. 차기 회장 역시 양측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회추위가 어떤 인물을 최종 후보로 낙점할지 주목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아파트 미입주 사유 1위 '잔금대출 미확보'



지난달 입주 기한이 끝난 전국 아파트의 미입주 사유 가운데 절반가량(45.8%)은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0%로 9월보다 3.2%포인트(p) 떨어졌다. 입주율은 해당 월에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단지에서 분양계약을 맺은 가구 가운데 입주와 잔금 납부를 마친 가구의 비율이다. 미분양 가구는 집계에서 제외한다.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25.0%), 세입자 미확보(12.5%), 분양권 매도 지연(2.1%)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8%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잔금대출 확보의 어려움이 입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입주율이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은 79.8%에서 81.2%로 1.4%p 올랐다. 서울은 84.8%에서 87.6%로, 인천·경기권은 77.3%에서 78.1%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봤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초보다 약 30% 늘고 매매가격 상승 폭도 둔화한 가운데,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월 큰 폭으로 올랐던 입주 전망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

카카오뱅크,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 오픈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답례품

카카오뱅크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제휴사 웰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 상당을 합쳐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도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전체' 탭의 '특산품 받고 연말정산 챙기기' 메뉴에서 전국 지자체별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면 카카오뱅크의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와 연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보금자리론 이용시 25만원 지원

HF 정책금융 고객 이벤트 진행

케이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금융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정책대출 이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케이뱅크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에 맞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배우자를 신청자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가격 등 다른 대출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서류 제출부터 약정,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